

3野 '백남기 특검안' 제출...상설특검 1호

여당이 법사위원장 맡아 가동까지는 '산넘어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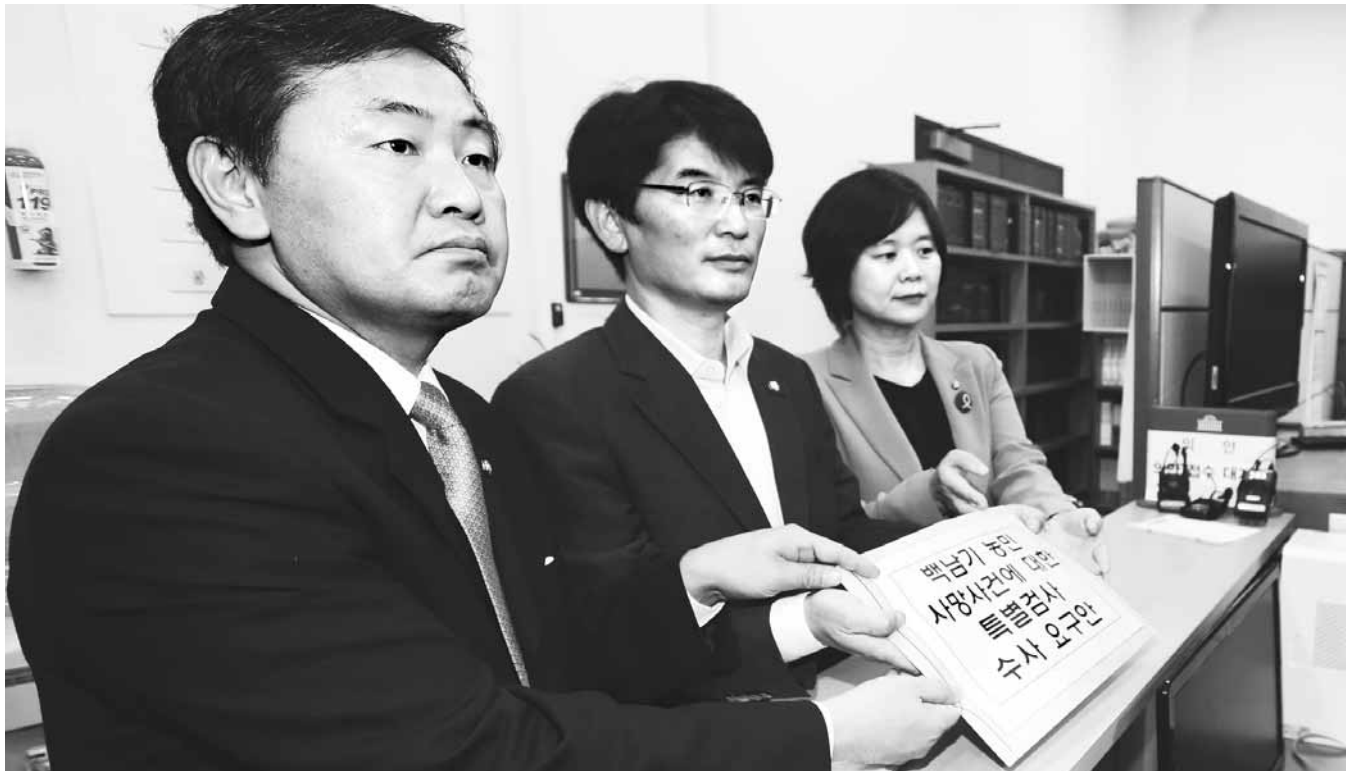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5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4년 6월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 제도가 생긴 이래 첫 번째 사례다.

그러나 여당이 특검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고 절차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특검안이 법사위를 거친다면 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야당 단독 통과가 어려워 상설 특검 가동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제출한 '경찰 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자체수사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특검 필요성을 밝혔다.

특검 대상으로는 사건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지휘와 보고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여부 등이 명시됐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 사망 진단서 작성 오류 논란은 진압 행위에 대한 사안이라 의학적 쟁점이란 이유로 일단 특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 3당은 별도 특검안이 아닌 상설특검안을 낸 데 대해 새누리당 박원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은 여야 합의로 만든 제도이니 만큼 여당도 전향적으로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5일 오후 민 백남기씨 사태와 관련해 야 3당이 상설 특검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원주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기존 제도 내에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는 차원에서 상설 특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실제 특검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특검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통과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반면 더민주 박 수석부대표는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모든 절차는 국감이 끝나고 나서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부검도 이뤄지지 않아 특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여당이 특검 추진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안전조정제도를 신청한다면 90일간 논의해야 하고 이때 의결정족수는 안전조정위원회의 3분의 2로 사실상 야당 단독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여당 위원장이며 인원은 새누리당 7명, 더민주 8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다. 그러나 상설 특검안이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된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만 갖추면 돼 야당 단독 통과가 가능해진다. 특검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 등 7명이 참여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추천위는 그로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검사 경력의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하며 수사기간은 60일로 30일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끝나도 최순실 게이트 밝힐 것" 野 총공세

"전경련 압력단체로 변질 시장경제 확립 위해 해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지도부는 5일 일제히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정국으로 인해 여론의 관심에서 밀려났던 관련 의혹을 정상화된 국회에서 다시 제기하며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더민주 김영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세탁 미션, 시간

끌기 미션을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세탁한다고 검은 옷이 흰옷이 되지 않는다. 국감이 끝나도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표상이 아니다. 정경유착은 곧 민주주의와 시장질서를 가장 해친다"면서 "전경련이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립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체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에 대해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배당도 되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에서는 왜 모처럼 국감이 시작됐는

데 정적검사를 안 하고 폭로를 하느냐고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 모든 것을 청와대와 정부가 바라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게 야당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더민주는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돈을 사실상 준조제로 간주하고, 법외세 인상을 연계하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미르게이트"는 정부가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로, 공적 권력으로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모금하는 사적 유용을 막고 법외세 인상을 통해 세금을 더 거둬 공적영역으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야 대표 병원 신세 이정현·추미애 입원

국회가 정상궤도에 올랐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들은 건강 이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단식투쟁을 끝내고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한 뒤 나흘째 외부 활동을 삼간 채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빠른 회복세를 간단한 일상 대화는 가능했지만, 아직 정상적인 식사나 거동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민주 추미애 대표도 감기몸살 등으로 지난 3일 오후부터 공식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추 대표는 애초 이날 저녁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몸의 상태가 악화하면서 일정을 취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전면적 쇄신 필요"

국민의당 천정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광주 서구) 의원은 5일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운영과 관련,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정부에서는 2018년까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급처벌 운영한다면 보여주기 위주, 행정편의적인 평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예산낭비, 인력낭비만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영하지 않거나 평정 오류(rating error) 등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급처벌 운영한다면 보여주기 위주, 행정편의적인 평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예산낭비, 인력낭비만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박대통령 통일 공약 예산 집행 절반 못미쳐"

국민의당 박주선

통일대박론을 강조해 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공약과 관련된 예산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광주 동남)에게 제출한 '통일부 업무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현황'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3년~2015년까지 총 9582억원의 통일공약 관련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액은 4,416억원(집행률 46.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집행률이 51.3%, 2014년 50.3%였던 예산집행률은 2015년 42.4%로 급격히 감소했다.



박 부의장은 "통일준비위원회 신설, 드레스덴 구상 발표 등 통일대박론을 설파했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구호에 불과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LH 임대아파트 입주민 수 년간 녹물 마셔"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여수 을)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수년간 녹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LH가 관리하는 827개 임대 단지중 물탱크가 있는 단지는 538개 단지이며, 이 가운데 70%인 378개 단지(30만2960가구)에서 맨홀 뚜껑이나 사다리 등에서 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작년 11월이었는데 1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 15개 단지만 철물을 교체했고 나머지는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입주민들이 몇 년이나 녹물을 마셨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15개 단지만 철물을 교체했고 나머지는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입주민들이 몇 년이나 녹물을 마셨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협 신규직원 채용, 수도권 대학 출신 74%"

더민주 이개호

농촌과 농민 등 지방살리기 설립 취지에도 농협의 신규직원 채용에 수도권 출신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이후 7차례 농협중앙회의 신규채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출신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89%까지 상승했다. 지난



2013년 하반기(38%)를 제외하면 여섯 차례 신규채용에서 수도권출신 비율이 50~60%대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신규채용 직원들의 최종 학교 출신 분석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지역 대학 졸업자 비율이 평균 74%를 차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